

2014. 12. 22. (월) 오전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민생경제팀 김후진 팀장 (02-731-2420),
이니영 사무관 (2423), 이윤진 사무관 (2422)

국가-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혁신을 통한 상생방안 제시

- 국민경제자문회의 제6차 회의 개최 -

- **12.22일(월)**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(의장)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위원,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」가 개최됨
- 이번 회의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「국가-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」이 보고·논의됨
 - 안건에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가의 제도개선, 지자체의 자구노력, 국가-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생발전 등 3대축을 기본으로 하여
 - 세입, 세출, 제도 전 분야에 대한 개혁 방향성과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함
 - 구체적인 과제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개편, 지방 교육재정의 혁신, 지자체의 구조조정 노력과 세수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비효율·낭비 철폐를 위한 국민감시체제 확립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됨
 - 과제 실행을 위해 ‘15년까지 개혁의 기반을 구축하고, 상시적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됨

「국가-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」 5대 제안

- 세부 과제로 ① 사무배분과 자원배분 기준 마련, ② 지방 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, ③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, ④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, ⑤ 국가-지자체 간 거버넌스 개혁 등 5개 과제를 건의

< 1 사무배분과 자원배분 기준 마련 >

- 국가-지방사무를 단순 이원화하여 자원배분과 일을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, 사무배분과 자원배분의 기준은 상이

- 사무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사무의 성격에 따라 재원을 분담* 하되, 협의기제 마련**

* 전국적으로 일을 시행(national minimum) 성격의 사무는 국가가 더 부담 (예: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률 75%), 지역 밀착서비스가 중요한 사무는 지자체가 더 부담(예: 지역아동센터의 국가부담률 48%)

** 국가-지방사무에 대한 자원분담을 구속력 있게 담보하는 협의기제 더 중요

- 국가가 일정부분에 대해 자원 분담할 경우, 지자체의 사업 집행에 대해 관리·감독 책임

< 2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 >

- 1960년대부터 50여년간 유지되어온 교부세 기준을 저출산·고령화·양극화 등 구조적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개선

- 지자체 자체세입 확대 시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어 자체세입 확충 유인을 감소시키는 교부세 기준을 개선

* (예) 교부세 측정항목에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, 자체세입 확대노력 비중 강화

- 또한,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배분 기준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한 특별교부세의 사전·사후관리 강화

○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재정운용 지양을 위한 제도개선*과 지방교육재정 혁신의 필요성도 제언

* 시도교육청 및 일반지자체 간 예산편성, 집행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복방지 등 사업효과 제고

* 일반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편성권은 세계적인 추세

- 초·중 의무교육, 인건비,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항목을 지정하여 예산에 우선반영하고, 성과위주의 재정 평가체계 정립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

< 3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 >

○ 국고보조금 사업의 총괄·관리 컨트롤 타워를 구축*하여 단계별 정비 추진

*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,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 심사강화, 집행점검 상시화·체계화, 정보공시 의무화 및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등

- 우선 부처와 재정당국의 검토에 따라 Top-down 방식으로 현행 유사·중복사업 및 소액다수사업을 통폐합·폐지
- 유사 목적 사업의 포괄보조사업화, 국가-지자체간 맞춤형 협약 방식 보조금 운영 검토 등 지자체의 사업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Bottom-up 시스템 구축

< 4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>

-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노력은 미흡한 반면, 국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하며,
 - 중앙정부는 탄력세율 활성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세원 발굴을 위한 인센티브*를 제공하고, 지자체도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 확대

* (예) 탄력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확보규모에 매칭하여 국가가 인센티브 지원 확대

< 5 국가-지자체 간 거버넌스 개혁 >

- 국가와 지자체 간 신뢰와 협력 중심의 소통사회 구현 기반을 구축
 - 국민들이 국가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*하여 낭비·비효율 철폐를 위한 국민감시체제 확립
 - * (예) dBrain(기재부), e호조(행자부), eduinfo(교육부) 등 산재된 재정시스템에 대한 재정통계 연계와 회계기준 통일 및 종합포털화
 - 예산결정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강화*하고, 지자체가 의무적 지출 미편성시 중앙정부의 시정 수단 마련
 - * (예) 각 부처가 지자체와 행자부 의견을 수렴해 국고보조사업 계획 수립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큰 정책사업 도입 시 의견수렴 절차 강화
 -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상호 연계를 위한 조항 포함

※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안건 참조

별첨. 「국가-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」 1부.